

(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0.5~10.11)

1 경제일반

1. 韓日 비즈니스 관계자 출입국 일부 완화(10.8) ①

1. 보도 동향

- (10월 중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감염확산을 계기로 일본은 2020.4월 이후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 거부, 한국도 장기 체류자를 제외한 일본인의 입국을 원칙 불허했으나, 이르면 2020.10월 중 왕래가 재개될 전망이다.

- (대상) 출장 등 단기체류 및 주재원 등 장기체류를 위한 입국 허용
- (조건) △단기체류의 경우, 코로나19 음성증명서 및 활동계획서 제출을 조건으로 하여 입국 후 2주간의 격리를 면제하는 한편, △장기체류는 입국시 검사 및 2주간 대기 전제 하에 입국 허용

※ 일본은 그간 일본인에 대해서도 귀국시 숙박시설 등에서의 2주간 격리를 권고

2. 언론 평가

- (관계 개선 기대) 한일 관계는 前정용공 문제 등으로 악화된 바, 왕래재개를 통한 경제교류 활성화가 양국 관계개선의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가 관건으로, 스가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9.24 전화회담에 양국 간 비즈니스 관계자 왕래 재개와 관련, 근일중 합의 도출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뜻을 모은 바 있음(교도통신).

※ 닛케이: 日 정부·여당 내에 한국과의 왕래재개가 조기 실현될 시 前정용공 문제 등으로 인해 악화된 한일 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고 기술

※ 2019년 방일 한국인수는 558만명으로, 중국(약 959만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이 중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 입국은 31만명(JNTO)

- 日 정부는 이미 한국 및 베트남, 중국 등 16개국·지역과 비즈니스 왕래 재개를 위한 협상을 추진해 브루나이, 대만, 말레이시아 등 9개국·지역과는 장기체류 왕래재개에 합의했으며, 싱가포르와는 장·단기 왕래재개에 합의한 바, 韓日 합의 시 한국은 두 번째 장·단기 비즈니스 왕래재개 대상이 될 것

2. 韓日 비즈니스 관계자 출입국 일부 완화(10.8) ②

1. 합의 배경

- (사회·경제 영향 축소) 日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주요국 등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원칙 거부해왔으나, 기업 출장자 및 주재원의 발이 묶이며 투자와 비즈니스 협상, 연구개발에의 영향이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경제 및 사회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6월부터 각국과 입국 제한 완화 협의를 개시함(닛케이).

※ 日 정부의 입국금지 대상국 159개국에 달하며, 일본발 도항자 및 일본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은 94곳(10.6현재 외무성)

- 비즈니스 관계자 대상 입국제한 완화 협상국은 비교적 신규감염자 수가 적은 아시아태평양의 16개국으로, 미국 및 유럽과는 협상 개시 전

2. 일본의 비즈니스 왕래 재개 현황

- (장기체류) 일본은 그간 한국을 비롯한 10개국·지역과 장기체류 주재원 등의 입국을 상호 허용하는 데 합의해 2020.9월 8개국·지역과 운용을 개시했으며, 10.8에는 한국 및 브루나이와도 운용을 개시함(닛케이).

- (단기체류) 출장 등 단기체류자의 상호왕래는 2주간의 대기조치가 면제되나, 일본 국내에서 7월 이후 신규감염이 재차 증가한 영향으로 상대국이 신증자세를 고수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는 사례도 있어 그간 합의에 이른 곳은 9.18 왕래가 재개된 싱가포르 뿐임.

- 관련하여 日 정부는 금번 한국과의 왕래재개를 계기로 일본의 감염상황에 대한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합의 방향으로 기울게 될 국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참고] 일본의 비즈니스 왕래 현황

비즈니스 트랙	입국후 14일 간 자택 등 대기기간 중에도 행동범위를 한정해 비즈니스 활동 가능	싱가포르, 한국(10.8)
레지던스 트랙	입국후 14일 간 자택 등 대기는 유지, 상호 왕래 재개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대만, 싱가포르, 브루나이(10.8), 한국(10.8)

※ 그 외 10월 이후 전세계 대상 사비유학생 등 3개월 이상 중장기 체류자 입국 조건부 허용

3. 언론 평가

가. 기업 관계자 반응

- 日 기업은 금번 한일 왕래재개를 긍정적으로 평가, 특히 도시바는 한국 내 조립식 의료설비 및 건물 승강기 설치 후 일본에서 전문 기술자를 파견해 안전성을 확인해온 만큼,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한국으로의 단기출장이 가능해졌다면 비즈니스상의 리스크 완화에 기대를 표명함(아사히).
- 한편, 세계적 감염확산이 수습되지 않은 점을 들어 ‘해외출장을 최소화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히타치)’ 며 신중한 기업도 존재

나. 향후 과제 등 전망

- (관계개선 여부)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은 日 정부의 두 번째 장단기 비즈니스 관계자 왕래재개 대상국으로, 前정용공 문제 등으로 韓日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금번 비즈니스 교류 재개를 관계개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도쿄신문).
- ※ 모레기 외무대신(10.6 기자회견) : ‘우선은 경제교류가 회복 체도에 오르는 것이 중요’
- 관련하여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출장이 가능하더라도 2주간의 격리조치가 유지될 경우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협의는 격리 면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하고 ‘인적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기대 표명

- (검사체제 확충 필요) 입국 조건이 되는 검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면 왕래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실효성이 결여되는 바, 향후는 공항 검사체제 확충이 급선무임(닛케이).
- 日 정부는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국제공항의 각 검사능력은 2020.9월 하루 총1만건으로 증강, 11월에는 신치토세, 주부, 후쿠오카도 포함해 하루 총2만건으로 늘릴 방침으로, 검사체제를 정비해 비즈니스 왕래 및 재류자격 소지자의 입국 확대로 이어나갈 계획
- (중국과의 협상 관건) 동맹국 미국에서 감염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은 왕래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중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왕래를 먼저 재개할 시의 정치 및 경제 영향을 각각 살펴 신중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음(닛케이).
- (수요환기에 관광객 불가결) 日 출입국관리통계에 따르면 2019년 신규입국의 98%는 관광객 및 출장자 등 단기체류자가 차지해 비즈니스 관계자가 원래 수준을 되찾더라도 관광객 급감이 이어지는 한 국내소비 환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닛케이).
- 입국제한 완화의 최종목표는 관광객 방일인바, 日 정부는 2021년 도쿄올림픽까지 가급적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감염방지와의 균형을 고려해 나갈 방침

3. 日 출입국 제한 추가 완화방안

1. 출입국 제한 추가완화책

- (대기조치 면제) 日 정부는 출입국 제한의 추가완화책으로, 해외 출장 후 귀국·재입국한 일본인 또는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행동 계획 제출 및 대중교통 미이용을 조건으로 귀국 후 2주간의 대기조치를 면제할 예정임을 10.7 밝힘.
- (대상국) 추가완화책 대상국은 전세계로 하며, 1일당 입국자 수는 일본인 포함 2천명 규모가 될 전망

- **(검사능력)** 현재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국제공항의 각 PCR 검사능력은 하루 총 1만건 수준이며,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검사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국제적 왕래 확대 가속화를 지시함에 따라 10월 내 추가 완화책을 결정, 조기 실시할 방침임.
- PCR 검사 가능 인원수가 당일 입국 한도가 될 것
- **(체제)** 대기 조치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일본 귀국시 日 국내 공항 검역소에 외무성이 정한 행동 계획서(일본 국내 숙박처·사무실 주소·귀국후 2주간의 이동경로 및 숙소계획)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 입국이 가능하며, 당분간은 행동 계획 사전 등록 없이 도착 공항에서 행동계획을 제출하는 체제로 대응
- 입국 후 2주간은 대중교통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동 범위도 직장·주택 왕복으로 제한되고, 출장 기간 등에 따라서는 해외에서 받은 PCR검사 음성 증명서의 제출도 필요

2. 日 정부 기존 조치 및 향후 목표

- **(기존 조치)** 기존에 日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대 이후 출입국제한 완화를 추진해왔으며, 전세계를 대상국으로 일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10.1 이후 인정한 바 있음.
- 또한, 日 정부는 이미 한국 및 싱가포르와 비즈니스 왕래 재개에 합의, 출장자 입국시 2주간 대기조치 不要
- 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는 독자적으로 일본인 입국시의 2주 대기조치 해제
- **(향후 목표)** 일본계 기업의 공장이 밀집된 중국·동남아시아 국가 등은 왕래 재개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아 日 정부는 이외에도 각 국가와 출입국 제한 완화 협상을 진행 중이나 경과가 미지수인바, 향후 日 정부는 우선 일본 입국시 격리조치만이라도 먼저 면제함으로써 기업 및 출장자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음.

- 日 정부는 출장 이외에도 출입국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해외의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했던 비즈니스 왕래 요건을 추가 완화할 방침
- 현재는 비즈니스용 제트기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체류 시간도 72시간 내로 한정되었으나 향후에는 체류 시간을 연장하여 전세기를 이용한 단체 이동도 인정할 예정
- 또한,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레벨3의 ‘도항 중단 권고’도 월내 목표로 일부 해제하고 레벨2의 ‘불요불급의 도항 자숙’으로 완화할 예정

4. 日 유학생 비자 발급 엄격화

- **(안보 관련 기술 유출방지 목적)** 日 정부는 안전보장과 관련된 첨단기술 및 정보가 유학생 등을 거쳐 중국 등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내년도부터 일본대학으로의 유학생 및 외국인 연구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를 엄격화하겠다는 방침을 굳힘.
- 日 국가안전보장국 및 외무, 법무, 경제산업, 방위성 등 각 부처가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공관에서도 활용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으로 해당 외국인으로부터 비자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 거부도 검토
- 외무성은 ‘21년도 예산 개산요구에서 동 비자심사 엄격화 관련 사업으로 2.2억엔 계상
- **(미국·호주 등 경계 강화 움직임에 동참)** 미국 및 호주는 최근 중국이 유학생을 이용해 조직적·전략적으로 기술 획득을 노리고 있다며 경계를 강화 중*으로, 미국에서는 정보기관이 유학생의 경력 및 개인정보를 조사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 올해 7월 중국군 소속이면서도 신분을 속이고 비자를 취득해 대학 연구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던 중국인 4명을 美 사법부가 체포 및 소추

○ 일본의 경우 비자 발급 단계에서 미국과 같은 엄격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에서 거부당한 중국인 유학생이 타겟을 바꿔 일본으로 오고 있다’ (경제안보 전문가) 는 지적 제기

○ 日 정부 내에서도 현 상태로는 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 (방위성·경제산업성도 경제안보 대응 강화) 비자 발급 심사의 엄격화 외에도 日 정부는 내년도부터 경제안보 대응을 강화할 방침으로, 방위성은 방위정책국 내에 ‘경제안전보장정보기획관’ 직책 신설을 검토 중이며, 각국이 군사 목적 활용을 위해 인공지능(AI) 및 레이저 등 新기술획득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태를 감안해 주요국 동향을 분석해 보전책을 검토할 예정임.

○ 경제산업성은 대학 등이 보유한 군사전용가능 최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동향을 조사하고, 기업 및 대학을 대상으로 관리의 철저화를 촉구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

- 개산요구에서 18.7억 엔의 관련 경비 계상

5. 日 재무성 2021년도 예산편성 요구 총액(105조 4,071억엔) 발표

1. 개산요구액, 7년 연속 100조엔 돌파 (마이니치, 아사히)

○ 요구 총액은 2020년도 당초 예산(소비세율 인상 대책 ‘임시특별 조치’ 外) 대비 4조 5,280억(4.5%) 증가한 105조 4,071억엔으로 3년 연속 사상최고액을 경신했으며, 요구액으로는 7년 연속 100조엔을 돌파함(2020년도 당초 요구액 대비 +4,073억엔).

- 이는 방위성 요구액이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한편, 국채 증가로 원리금인 ‘국채비’가 전년대비 9.2% 증가한 영향

- 단, 재무성은 코로나19 감염상황 전망 곤란을 이유로 코로나19 대책 등을 ‘긴요경비’로 하여 통상 예산과는 별도로 상한을 두지 않는 예산요구

를 인정, 각 성청으로부터 요구 시점 금액을 제외한 항목만을 요구하는 ‘사향요구’가 속출한바, 최종적으로는 사상최대 예산을 기록했던 2020년도 예산 규모를 웃돌 가능성 有

[각 성청별 2021년도 예산 개산요구액 내역]

	일반회계 요구액(억엔)	이 중 '긴요경비' 요구액(억엔)
내각·내각부	4조 270(4.5)	1,528
경찰청	3,368(▼0.1)	266
총무성	16조 8,263(1.9)	365
법무성	8,362(6.0)	475
외무성	8,090(13.6)	953
재무성	1조 8,944(4.9)	914
문부과학성	5조 9,118(11.4)	5,983
후생노동성	32조 9,895(0.0)	112
농림수산성	2조 5,620(19.9)	3,646
경제산업성	1조 1,909(27.5)	2,219
국토교통성	6조 1,437(1.1)	861
환경성	4,084(26.0)	245
방위성	5조 4,897(4.3)	1,571
국회·법원·회계검사원	4,792(2.0)	44
항실비	85(▼26.7)	-
정책경비 소계	79조 9,137(3.1)	1조 9,185
국채비	25조 4,934(9.2)	-
합계	105조 4,071(4.5)	1조 9,185

※괄호는 임시특별조치 外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2. 전망 등 언론 평가

○ (‘긴요경비’, 코로나19 관련성 판단 必) 금번 개산요구 ‘긴요경비’에서는 우주개발 및 신칸센 정비 등 감염증과 관련성이 열은 항목이 다수 관찰된 바, 재무성에는 균형 잡힌 ‘현명한 지출’ 실현을 위한 심사 능력이 요구됨(마이니치).

- (문부과학성) ‘긴요경비’에 ‘코로나사태를 감안한 사회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새로운 일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비에 2,838억엔(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80% 증가) 요구,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생활양식’도 고려한 환경 정비’를 위해 학교 화장실 수세식화 시설 정비 등 위생 확보에 1,295억엔 계상

- (국토교통성) 日 정부의 재택근무 및 도쿄일극집중 시정 추진 영향으로 향후 이동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를 통한 고용 창출 및 완공후

중장기적 경제 효과'를 이유로 정비 신칸센 건설비 일부를 '긴요경비'로 편성, 도시 간선도로 및 철도 정비도 동일한 이유를 들어 2020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증액 추진

- (각 성청 설명책임 大) '긴요경비' 중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사항요구'에는 코로나19 검사체제 확충 및 백신·치료약 개발 경비, 디지털청 경비 및 관광지원, 재해대책 등 상황에 따라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된 반면(아사히), 코로나와의 관계가 명확치 않거나 정부 방침과 무관한 사업도 적지 않음(마이니치).

- 향후 정부 예산안은 재무성과 각 성청의 비공개 협상 단계로 넘어가나, '금액뿐 아니라 내역이 충분히 결정되지 않은 요구도 눈에 띄는(재무성 간부)' 바, 예산 산정 근거 등 각 부처의 설명책임은 예년보다 더 막중해질 것(마이니치)

※ 이토 副재무대신(10.7 기자회견) :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뿐인 요망이 많아 각 부처와 논의를 거듭해 질 높은 예산을 편성할 것'

6. 日 자민당 정부 제언 '중간보고' 수립

- (정부 제언 '중간보고' 발표) 日 자민당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는 올해 안에 정부에 제시할 제언의 '중간보고'를 책정,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의 빠른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준비, △국가전략에 경제안전보장 관점을 반영하는 '경제안보일괄추진법' 제정을 촉구함.

<자민당 정부 제언 '중간보고'의 요지>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위한 법 정비 준비
- '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법' 제정
- Five Eyes 참가 및 연대
- '6G' 집중투자 및 국제표준 형성
- 사이버 공격 저지하는 법 개정 검토
- 외국자본에 의한 토지 거래 규제
- 연구기관 및 특허 정보 공개 제한

-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도입 위한 법 정비) 동 제언에서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본은행이

디지털 위안화의 실증실험 상황을 파악하고 미국 및 유럽과 협력해 '필요한 법 개정에 관한 정리'를 하도록 제안함.

- 이는 재무성이 소관하는 일본은행법 개정도 염두에 둔 것으로, 일본은행법은 일본은행이 은행권을 발행하고 재무상이 지폐의 제조 및 절차를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디지털 통화 발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전망

- 디지털 통화 도입과 관련해, 日 정부는 7월 각의결정한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호네부토 방침)'에서 '검토한다'고 명기한 바 있으며, 일본은행은 결제기구국 결제시스템과에 '디지털 통화 그룹'을 설치, 유럽중앙은행(ECB) 등 5개 중앙은행과 공동연구 개시

※ 美 FRB는 독자적으로 연구를 추진 중이며, 수년 내로 디지털 위안화 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중국이 주요국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추정

- (경제안보 추진법안 검토) 경제정책을 비롯한 각종 국가전략에 경제안보의 관점을 반영하고, 관·민이 연대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 및 추진방법을 제시하는 '경제안보일괄추진법'을 검토할 것을 요구함.

- 동 제언에서는 미국 및 영국 등 5개국이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정보동맹 'Five Eyes'에 참가하는 것을 포함한 국제연대 강화를 제안

- 가입 실현 시 빠른 단계에 정보공유 및 기밀성이 높은 내용의 정보교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스파이활동 억지 등 정보 보호체제 강화 및 美 중앙정보국(CIA) 등 해외기관과 정보수집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했으며, 기업에 대해서도 정보관리 강화를 촉구

- 그 외 경제안보 관련 △정부 및 기업의 사이버공격자를 특정해 추가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외국인 및 외국자본에 의한 원전 등 중요 인프라시설 주변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법 정비, △일본의 연구 및 특허 정보의 공개, 외국 자금 및 연구자 수송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시책의 필요성도 강조

□ (‘6G’ 관·민 집중투자) 통신분야의 경쟁력 향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5G’의 다음 세대 기술인 ‘6G’ 분야에 관민이 집중투자 하여 세계 최초의 제품화 및 국제표준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유통되는 정보량이 급증하는 6G 시대에 대비해,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日 국내 정보인프라를 정비 및 증강해야 한다고 지적
- 5G 네트워크 관련 日 국내통신기기 판매사의 해외전개를 지원할 필요성도 명기하였으며, 중국세에 대항해 미국 및 유럽과 연대하여 국제표준 형성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

7. 주택대출 완납 연령 상승

□ 닛케이의 주택금융지원기구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 주택대출 이용자의 완납 계획 연령이 2000년도 대비 5세 상승한 평균 73세로 최고령을 기록함.

- (주택대출 상환 연령 상승) 닛케이가 대표적 주택대출인 ‘플랫35*’를 제공하는 주택기구 자료를 토대로 이용자의 연령 및 용자액·기간 데이터를 수집해 2000년도~2020년도(4~7월) 이용자 약 122만명을 분석한 결과, 2000년도 이용자의 평균 완납 연령은 68.3세로 가장 낮았던 반면, 2020년도는 73.1세로 최고령을 기록함.

* 주택금융지원기구가 민간금융기관과 연계해 제공하는 용자기간 최장 35년의 주택대출(금리 고정), 2003.10월 전신인 주택금융공고가 취급 개시

- 동 상환 연령 상승은 ①만혼화에 따른 주택 취득 시기 지연*, ②초저금리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③이에 따른 상환기간 장기화(2020년도 평균 32.7년)의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2000년대 초 차입 연령은 평균 37~38세, 2013년도 이후는 40대로 추이(2020년도 평균 40.4세)

** 평균 용자액은 20년간 2,900만엔에서 4,100만엔으로 증가

- (용자액 증가, 엄격 심사 必) 고용이 70세까지 보장되더라도 ‘역직정년(役職停年, 간부직 직원을 60세가 된 시점 간부직에서 면해 일반적으로

이동 시키는 제도)’ 도입으로 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며, 퇴직금 감소 추세 등 영향으로 60세 시점 대출 평균잔액이 20년전 대비 약 600만엔 상승한 1,300만엔 이상으로 증가함.

※ 60세 시점 대출 평균잔액 1천만엔 이상은 ‘노후파산예비금’(미쓰비시종합연구소 추계)으로, 1990년대 차입자의 10%가 이에 해당되며, 20년 후에는 동 비율이 20%에 달할 전망

- 한편, 연금 지속성 훼손에 따른 노후 리스크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가 구입 촉진책을 내놓았으며, 금융기관이 주택대출을 주요 수익원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초저금리로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도 감소
- 상기 관련, 오가키 히사시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는 ‘채무자의 책임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며 대출자에 엄격 심사를 요구하는 한편, 퇴직 시점의 예상 대출잔액과 주택의 장래 가치를 따진 균형 잡힌 용자가 필요하다고 강조

8.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운전원 체제 점검 결정

- (담당 운전원 체제 점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 감시 및 사고대응을 위해 부지 내 면진(免震) 중요동에 상주하는 당번 운전원 체제를 점검하기로 한 바, 現 7명 체제를 업무 재정비 후 ‘4명 이상’으로 변경할 계획임.

※ 2012년 마련된 현 체제는 운전원 7명이 1개반으로 편성되어 주야 2교대로 노심 온도 및 주수 상태, 원전 작동상황 감시 등 안전관리를 담당, 사고 및 문제 발생시 현장 확인 및 복구 착수

- 금번 결정은 사고로부터 약 9년 반이 지나 방사선량이 줄었고, 현장작업도 용이해져 최소 4명 근무체제로도 긴급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
- 도쿄전력은 금번 변화에 따른 ‘안전성 훼손’은 없을 것이라 설명,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규정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향후 구체적 인원 등을 검토할 계획

- (근무 체제, 안전 최우선) 도쿄전력은 주수(注水)설비 운전 전환 등 낮 시간 업무가 많아 별개 그룹으로 낮 업무 지원을 확충해 해당 그룹에 설비

점검 전 안전확보를 위한 조작을 위임하는 편이 실수가 적으며, 동 그룹에게 야간 순찰도 맡겨 당번 운전원이 감시 및 사고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함.

- 한편, 오염수처리 설비는 2016년 이후 별개 그룹이 관리 중이며, 도쿄전력은 ‘폐로작업의 진척상황을 감안한 체제로, 향후도 안전 최우선 체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

9. 日 전력 유통사 대상 자금징수 제도 개시

1. 제도 상세

- **(자금 징수제도 도입)** 발전소를 보유한 전력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회사에서 전기를 구매하여 가정·기업에 판매하는 유통회사 등을 대상으로 거액 자금을 징수하는 제도가 시작됨.
- 동 제도는 화력발전소 등을 유지·보수하여 전력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日 경제산업성이 주도한 제도로, 2021년도 이후에도 항구적으로 지원을 계속할 방침임.
- **(제도 배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으로 전력 가격이 하락하여 화력발전 수익이 저하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는 기후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므로 화력 발전량이 감소하면 비상사태 대응이 불가하다고 판단, 동 제도를 실시하기로 함.
- 경산성 등은 원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2024년까지 필요한 국내 총발전능력을 추정하고, 전력 회사에 제공 가능한 발전 능력과 원하는 가격을 입찰 방식으로 제출하게끔 하는 ‘용량시장’ 구조를 도입한 바 있음.

2. 평가

- **(주요 회사는 매출 증가전망)** 도쿄전력 등 산하에 전력유통회사 및 발

전회사를 모두 보유한 주요 회사는 소매 분야 부담은 증가하나 발전 부문에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원전 포함 100만 kW 규모 발전소를 보유한 회사에는 연평균 90억엔 전후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임.
- **(비판)** 단, 첫 입찰(2020.7월 실시)에서 지원(필요) 총액이 예산을 웃도는 1조 6,000억 엔임이 밝혀지자 유통회사는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전력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음.
- NPO법인 원자력자료정보실 관계자는 동 정책이 결국 ‘원전 및 오래된 석탄화력발전 연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에너지정책 전문가인 쓰루문과대학 다카하시 교수는 ‘용량시장은 기업의 경쟁을 방해하고 기후변화대책에 반하는 구조로, 소비자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함.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0. 日銀, 2020.9월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短観)’ 결과

※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관)」는 일본은행이 통계법에 근거하여 전국 기업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매분기마다 실시함. 업황판단, 매출·고용·설비투자 등 연도계획, 물가 전망 등 항목을 조사하며 금번 조사는 8.27~9.30 기간 중 기업 9,537社(회답률 99.3%) 대상으로 실시

1. 9월 조사 결과(요약)

- **(체감경기) 전체(全산업·全규모)** 업황판단지수(DI, %p)는 -28로 전기 대비 3 상승
- ※ 업황판단지수(DI·Diffusion Index)는 업황이 ‘좋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나쁘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을 차감하여 산출
- **(규모별)** 대기업(전기 대비 5), 중견기업(2), 중소기업(2) 모두 상승
- **(산업별)** 제조업(전기 대비 2) 및 비제조업(4) 모두 상승

- **(경기전망)** 3개월 후의 업황 전망을 보여주는 전체 업황전망지수(DI, %p)는 -31로 전기 대비 6 상승
- **(규모별)** 대기업(전기 대비 7) 및 중견기업(1)은 상승, 중소기업(0)은 전기와 동일
- **(산업별)** 제조업(전기 대비 6)은 상승, 비제조업(-3) 하락
- **(고용 동향)** 고용 현황에 대한 기업 인식을 보여주는 전체 고용인원판단지수(DI, ‘과잉’ - ‘부족’)는 전기와 동일한 -6으로 집계, 고용 ‘과잉감’ 지속

2. 언론 평가

- **(대기업 체감경기 악화 제동)** 대기업 제조업 부문 업황판단지수(DI, %p)는 지난 6월 조사 대비 7 상승한 -27로 17.2월 이래 2년 9개월 만의 개선을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로 정체했던 경제활동의 재개에 따라 비제조업 부문(전기 대비 +5)도 개선을 기록하는 등, 대기업 체감경기 악화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임.
- 대기업 제조업 DI는 ‘18년 이후 미중무역마찰 등으로 악화 경향이 계속되어 온 가운데 20년 들어 코로나19 감염확대로 한층 더 침체한 상황이었으나, 세계적인 경제활동 재개로 수출 및 생산이 회복되며 체감경기 악화에 제동
- 주요 16업종 중 11업종이 개선을 기록한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큰 부문은 ‘석유·석탄제품’ (전기 대비 +19)이었으며, 수출 개선으로 자동차(+11) 부문이 회복세로 전환하며 ‘철강’ (+3) 등 폭넓은 관련업종도 개선
- 한편,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보임에 따라 ‘생산용 기계’ 등은 악화
- 대기업 비제조업 부문 역시 주요 12업종 중 10업종이 개선하며 1년 3개월 만의 개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외출자제로 인한 집콕 수요로 ‘소매(+16)’의 상승폭이 현저

- 전회 조사에서 과거 최저를 기록했던 ‘숙박·음식 서비스’ (전기 대비 +4) 외에 레저 시설 등의 ‘對개인 서비스’ (+5)도 개선

- **(전반적인 개선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 중소기업 업황판단DI도 제조업(전기 대비 +1), 비제조업(+4)이 모두 개선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DI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임.
- 대기업 제조업은 리먼 쇼크의 영향으로 크게 침체했던 ‘09.12월(-24)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비제조업 역시 ‘10.3월과 비슷한 수준
-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경기가 ‘나쁘다’고 응답한 기업 수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으로, 양쪽 모두 코로나19 감염문제가 부상한 직후인 3월 조사의 DI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고용 ‘과잉’ 감 경계 고조)** 자사 종업원에 대해 ‘과잉’이라고 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부족’이라고 답한 비율을 차감한 고용인원판단DI(전산업·전규모)는 전회 조사와 동일한 -6을 기록, 고용과잉감 지속되고 있음.
- 고용인원판단DI에서 과잉감이 고조되면 인원삭감이 확산되며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리먼 쇼크가 있던 ‘08.9월 조사에서 -2를 기록한 DI가 09.6월 조사에서는 23으로 상승하며 급속히 고용과잉감이 상승하자, 동 기간 완전실업률은 4.0%에서 5.2%로 상승
- 코로나19의 타격이 큰 숙박·음식 서비스의 경우 지난 6월 조사에서는 조사 개시 이래 가장 높은 27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Go To 캠페인’의 실시로 최악의 시기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나 방심할 수 없다. 고용 관련 정부 조성금이 축소될 경우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전국여관호텔생활위생동업조합연합회 다다 게이스케 회장)는 견해 존재
- **(업종간 격차 양상)** 자동차 및 철강 등 수출관련 업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집콕을 회피하는 생활양식의 영향이 큰 숙박·음식 및 對개인서비스의 회복세는 약한 등 전반적인 수치 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는 명암이 갈리고 있는 상황임.

- ‘기업의 체감경기 개선 정도는 시장이 사전에 예상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수출이 재개된 자동차 및 기계류나 집콕 수요의 수혜를 받고 있는 통신업에 비해, 숙박·음식 등 서비스는 침체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업종별 격차가 생겨나고 있다’ 는 지적(메이지야스다종합연구소 고다마 유이치 펠로 치프 이코노미스트)
- (경기전망 완만한 회복세) 3개월 후 업황 전망에서는 대기업 제조업이 전기 대비 10 상승한 -17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머무르고 있어, 경기 전망의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보임.

11. 日銀, 2020.4-6월기 수급갭 추계 발표(-4.83%)

□ 일본은행은 10.5 일본경제 전체의 수요와 잠재적 공급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급갭’의 2020.4~6월기 추계가 -4.83%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리먼사태 이후 11년 만의 하락폭) 수급부족을 의미하는 마이너스갭 진입은 2016.7~9월기(0.16%) 이래 3년 9개월 만으로, 마이너스폭은 2009.4~6월기(-5.53%) 이래 11년 만의 최대 수준을 기록함.

※ 일본은행은 2020.7월 경제·물가정책전망(전망리포트)에서 당분간의 수급갭과 관련 ‘감염증 영향에 의한 실업률 상승 및 노동시간 감소, 자본가동률 저하 등으로 인해 확실히 악화되어 큰 마이너스로 추이될 것’이라고 설명

- 내역별로는, 공장 등 가동상황을 포함한 △자본투입갭이 -2.70%, 노동시간 및 취직률을 반영하는 △노동투입갭은 -2.14%로 2009.4~6월기(-1.48%) 수준을 뛰어넘어 1983년 이래의 사상 최대의 마이너스폭 기록
- GDP를 토대로 산출하는 내각부 수급갭은 2020.1~3월기 -2.4%(2사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와는 달리 취직률 및 설비 가동상황을 반영해 계산하는 일본은행의 수급갭도 수요가 공급력을 하회한 결과 도출
- (코로나19 여파) 2020.4~6월기는 日 정부가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하는 등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정체된 시기에 해당하는바, 음식 및 숙박

등 매장휴업 및 영업제한으로 노동시간이 급감해 휴업자와 실업자가 증가하고, 생산조정을 위한 공장가동률 저하도 영향을 미친 결과임.

-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기는 하나, ‘회복이 늦다(미즈호증권 관계자 인용)’ 는 견해가 다수이며, 10.1 일본은행의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판)도 제조업·비제조업 업황판단지수(DI)가 모두 마이너스권으로 추이(연호 참조)

- (고용, 일본경제 최대 관전) 현재는 산업 및 시간제 근무 등 노동시간 감소가 성행중이나, 고용 및 임금 불안은 소비억제의 요인이므로 기업 및 정부에 있어 고용유지는 중요 과제임.

- 일본은행은 2013년부터 ‘인플레이션 2%’ 목표를 내걸고 대규모 금융완화를 실시해왔으나, 목표 달성은 요원한 상황이며, 임금하락이 이어져 개인 소비가 부진한다면 물가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 노무라종합연구소 관계자 : ‘수요부족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향후 2~3년간 물가는 마이너스로 추이될 것’

3 대외경제 동향

12. 日·英 EPA 관련 동향

1. 협상 경과

- (관세 특혜대상) 日英 양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체결 예정인 경제 연계협정 (EPA)을 통해, 유럽연합(EU)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공업 제품도 관세 특혜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임.
- 日英 정부는 新 EPA의 ‘원산지규정’ 관련, EU산 부품도 자국산으로 취급하는 ‘확장능적’ 구조를 도입하는데 합의했으며 적용 대상은 자동차 등 전체 공업제품이 될 예정
- 동 협정을 통해, EU산 부품을 사용하여 일본에서 완제품을 조립 후

영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계속 관세 특혜 혜택을 받을 예정

- 日-EU EPA는 관세 우대가 적용되는 역내 부품 조달 비율 기준을 55%로 정했으나, 日英 EPA에서는 이를 50%로 완화
- 日 자동차제조사 중 EU산 엔진 등을 사용한 완성차를 영국에 수출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여, EU산 부품이 탑재된 완성차가 ‘일본제’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對英 수출 관세율이 높아지는 만큼, 산업계는 원산지규정에 관심을 기울여 옴.
- (日英 EPA 기간) 日英간에는 현재 日-EU EPA에 기반한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영국의 EU탈퇴 이행기간인 2020.12월 말을 끝으로 관세 혜택도 만료되는 만큼, 日英 정부는 의회 승인을 거쳐 2021.1.1 日英 EP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
- 日 모테기 외무대신과 英 트러스 국제무역장관은 지난 9.11 日英 EPA 체결을 위한 대략적 합의를 전화 회담을 통해 확인했으며, 트러스 장관은 협정 서명을 위해 訪日을 검토 중
- (英EU 통상협상 난항) 한편, 英-EU간 통상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어 日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발생함.
- 英-EU 간 무역에서 일본산 부품이 사용된 완제품이 관세 특혜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일본 기업이 수출시 고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
* 일례로, 일본 기업이 일본제 부품을 사용하여 영국에서 제조한 완제품을 EU에 수출하는 경우 등에는 고관세가 적용
- 日 도요타·닛산 등은 英 정부를 대상으로 英-EU간 협정 불발시 발생할 관세비용 보상을 요구

2. 언론 평가 (닛케이)

- (자유무역 기조 유지 필요) 8년 가까이 이어진 아베 신조 前 정권의 경제·외교 정책 중에서도 자유무역 지역 확대는 큰 성과 중 하나로, 스가 요시히데 新 정권이 향후에도 ‘자유 무역의 기수’로서의 리더

십을 마음껏 발휘해 주기를 기대함.

- (日英 EPA) 일본은 영국과의 EPA 협상에서 철도 차량 및 부품,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자제어반 등 일부 공산품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데 성공했으며, 관세뿐만 아니라 원산지 규정에서도 일본 측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냄.
- 日英 EPA는 대략적 합의를 이루었으나 영국과 EU의 통상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어, 기한 내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바, 일본은 출선하여 동 협정이 체결되도록 촉구하여야 함.
- (기타 협상 등) 英 트러스 국제무역장관은 일본을 포함한 TPP 가입에 강력한 관심을 보이며 2021년 초 가입할 의향을 표명한 만큼, TPP를 주도해온 일본이 중심이 되어 영국 참여를 실현시켜야 함.
- 일본·중국을 포함한 16개국의 RCEP 협상도 인도가 이탈하는 등 중대 국면을 맞이하여 연내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인도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직전까지 계속하여야 함.
- 또한 무역장벽 철폐를 주축으로 하는 FTA뿐만 아니라 생산거점 이전 및 합작 사업의 법적 기반을 이루는 양자간 투자 협정도 확충할 필요
- 2014년 발효된 韓中日 투자협정은 중국 내 日 기업의 사업 전개를 지원하는 데는 역부족인 만큼, 대만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각국을 비롯하여 일본 기업에게 중요한 국가·지역과의 투자 협정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
- 세계무역기구(WTO)도 사무총장 부재 또는 분쟁처리상의 장애를 해소하는 것이 선결 과제

13. 소니·키옥시아, 美 상무부에 화웨이 거래재개 신청

□ 美 상무부의 對화웨이 반도체제품 공급 금지 조치와 관련해 소니와 키옥

시아(舊 도시바메모리)가 10.3까지 거래 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10.3시점 미승인), 美 정부가 동 신청을 불허할 시 이는 실적 부진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화웨이와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도 신청 완료

- (소니) 스마트폰용 이미지센서 세계 시장점유율 1위 기업으로, 화웨이는 同社 이미지센서 매출(약 10조엔)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등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거래처이나, 2020.8월 결산발표 당시 2021.3월기 이미지센서 사업 영업이익이 전기대비 45% 감소한 1,300억엔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

- 이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스마트폰 수요 침체가 주요인이나, 시장에는 美 상무부의 對화웨이 제재 강화에 따른 전망 하향수정을 우려하는 견해도 존재

- (키옥시아) 스마트폰용 메모리 매출액이 전체의 40%를 차지, 화웨이 공급 비중도 높아 美 제재의 영향이 큰 가운데, 미중 마찰로 반도체 시장 불투명성이 높아지며 10.6 예정되었던 도쿄 증권거래소 지주회사 상장 연기 결정

□ 상기 관련, 인텔 등 최근 일부 미국계 반도체업체가 PC용 제품의 거래 재개 허가를 취득했으나, 미국이 5G 스마트폰 및 기지국 등 중국의 통신기술 부상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美 정부의 對中 강경자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14. 美 정부 對화웨이 제재 강화에 따른 日·中 기업 영향 확산

1. 美 정부 對화웨이 제재 강화에 따른 日·中 기업 영향 확산

가. 日 소니 및 키옥시아 (아사히)

- 소니 및 키옥시아는 美 상무부에 화웨이와의 거래 재개를 신청, 승인될

시 타사도 이를 추종할 가능성이 있으나, 금번 신청과 관련해 ‘신청 중 하나에 불과하며, 허가 여부는 알 수 없다(동 2개사 간부 인용)’ 며 소극적 견해도 존재하는 등 日 기업 내에는 거래 재개를 단념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음.

- △키옥시아는 실적 전망이 곤란해짐에 따라 당초 10.6 예정되어 있던 도쿄증권거래소 주식상장 연기를 표명(9.28), △소니는 2018~2020년도 3년간의 반도체 설비투자 계획을 당초 7천억엔에서 2020.8월 6,500억엔으로 감액한다고 표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주요 고객의 수요 변화를 고려해 신중하게 타이밍을 수정할 것(도토키 부사장 인용)’ 이라는 입장

나. 美, 中 SMIC 제재 시행 (닛케이, 요미우리)

- (美 업체, 수출시 사전허가) 中 최대 파운드리 SMIC는 10.4 성명을 통해 일부 美 거래처가 자사에 설비 및 재료를 수출할 시 美 정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해졌음을 정식 인정하고, ‘향후 반도체 생산 및 운영에 중요하고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며 美 상무부와의 협의 개시 사실을 공개함.

※ 10.5 홍콩증권시 SMIC의 주가는 한 때 낙폭이 8%에 육박하며 약 4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닛케이)

※ 아사히는 시장관계자를 인용해 많은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 업체가 SMIC와 대량 거래를 하고 있어 同社로의 수출규제는 일본기업에도 역풍이 될 것이라고 기술

- SMIC는 그간의 미국 및 유럽 현지 언론 수출제한 보도에 대해 정식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금번 美 상무부가 SMIC의 일부 거래처에 수출 시 사전허가 취득 필요성을 통지했음을 확인
- 고성능 반도체 생산에 불가결한 미국의 제조장치 및 기술을 토대로 성장하며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온 SMIC의 신규 제조장치 도입이 금번 제재로 곤란해질 경우, 보다 성능이 우수한 반도체 제조와 생산능력 증강 계획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

- (향후 전망)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자급을 향상 등 시진핑 정권의 반도체 국산화 전략 핵심인 SMIC(中 국영통신기기업체 및 국책펀드 등이 대주주)가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시 정권의 제조업 발전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SMIC-美 상무부 간 협의 개시와 관련해서도 美 정부 내에는 중국의 하이테크 분야 부상에 대한 경계감이 커 규제 해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4 기타

15. 日 기업, 中 철수 시 노동분쟁 리스크 주의 필요

□ (中 사업 철수 검토 日 기업 증가)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에 더해 미중무역마찰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및 최근 수년간의 인건비 급등 등 중국내 사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中 사업 철수 및 축소를 검토하는 日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규제완화 등을 배경으로 하이테크 분야를 중심으로는 中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한편, 채산이 맞지 않는 사업 분야를 정리하려는 움직임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사업을 재고하는 일본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앤더슨·모리·도모쓰네 법률사무소 북경 오피스 대표 와카바야시 고우 변호사)는 지적

□ (노동분쟁 리스크 주의 필요) 다만, 중국에서는 대규모 노동분쟁도 일어나기 쉬워, 철수 시 주의가 필요하며, 실제 어떠한 방법으로 철수하는 것이 좋은지 관련해 ‘상대적으로 문제 발생이 적은 방법은 지분양도에 의한 철수’ (스즈키 야스유키 변호사)라는 전문가 견해가 제기됨.

- ‘지분양도’ 철수의 경우, 양도처와 합의가 이루어진 후 주주회의 의결 및 中 정부상무(商務)부문으로의 서류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
- 주주회의 의결 후, 행정 절차에 필요한 기간은 빠르면 1~2개월로 철수 절차 완료까지의 시간이 짧고 비용도 비교적 낮은 편이며, 법인이 존속하기 때문에 종업원으로부터의 소송 제기 등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점이 장

점

- 다만, 지분 양도처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난점으로 합병 파트너가 없는 경우 새 양도처를 찾아야 하나, ‘중국에서는 M&A중개기업이 일반적이지 않으며 일본처럼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개인적인 소개도 많은 편’ (와카바야시 변호사)

○ 양도처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청산’을 선택하게 되나, 그 경우 지분양도 방식에 비해 종업원의 정리 및 행정절차 등에서 필요한 절차 및 교섭 상대가 많아 철수 완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며, 추가징세 부과 가능성도 있어 퇴직금 지불 등 포함하여 거액의 비용 필요

- 중국에서는 외자계 기업의 파산 신청 전례가 거의 전무하여, ‘파산에 따른 철수는 거의 실제 사례가 없는 상황’ (노무라 다카시 변호사)

□ (보상금 요구 파업 등 전례) 중국에서는 해고 시 반드시 종업원의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외자계기업의 경우 높은 수준의 금액이 청구되거나 무리한 요구를 당하는 경우도 존재함.

- 일례로 ‘16년 소니가 광둥성 공장을 현지기업에 매각하고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을 때, 종업원 측의 보상금 요구 파업이 발생
- 법률상 소니가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었으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최대 1만 6천엔의 ‘공로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타협

○ 철수 및 인원정리 관련해 종업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타이밍에 누구에게 전할지 등을 포함한 면밀한 스케줄을 짜는 것이 필요

※ ‘최근 (철수 관련해)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도 늘고 있음. PR회사 등과도 상담하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상책’(현지 변호사)

- 일본계 기업의 현지법인 근무경험도 보유한 중국의 주가평 변호사는 ‘철수로 발생하는 분쟁은 일본 본사가 현지법인과 의사소통을 게을리 한 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는 등 평소부터 中 자회사 및 합병 파트너에 모든 것을 위임해버리지 않도록 하는데 주의 필요

<中 사업 철수 시의 포인트>

	장점	단점
지분양도	- 교섭이 순조로울 경우 수개월 만에 철수 절차 완료 - 노동 분쟁 리스크 낮음	- 양도처를 찾는 것이 곤란 - 양도가격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음 - 자산을 양도해도 법인은 존속
해산·청산	- 완전 철수 가능	- 절차 및 교섭상대가 많아 외 료까지 시간 소요 - 추가 징세 및 노무 분쟁 리스 크 높음

16. 코로나19 관련 건설사 등 대응 현황

1. 생활 설비 및 환경 개선 요구 증가

- 오픈하우스가 2020.5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80%가 ‘생활 설비 및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집의 구조 및 설비 관련, ‘집에서 일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변함없이 역세권 등 편의성을 중시하면서도 다양화된 생활양식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음.

2. 각 기업 대응 현황

가. 재택근무 대응

- (미쓰비시지쇼·킨테쓰 부동산) 2020.11월 말 지바현 우라야스에서 대규모 맨션 분양을 시작할 예정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주민을 위해 쉼세대(528호) 25% 이상의 거실 및 침실 모퉁이에 책상으로 사용 가능한 카운터를 설치해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를 구비함.
- (미쓰이부동산) 2020년 가을 도쿄 가치도키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대형 맨션(2개동, 세대수 총2,786호)의 공용시설에 약 300m²의 텔레워크용 공간을 마련하고, 3LDK 및 2LDK 구입자에게는 집안 구조를 업무 공간으로 변경 가능한 ‘서재 플랜’도 제안할 계획임.

나. 비접촉 대응

- (닛테쓰코와부동산) 2021.11월 말 요코하마에 완공 예정인 신축 분양 맨션에 비접촉 엘리베이터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적외선 빔 형식의 센서를 이용한 ‘비접촉버튼’에 손을 대면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목적층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용자는 사전에 엘리베이터의 혼잡도도 파악 가능함.
- (LIXIL) 접촉하지 않고 리모콘으로 현관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을 9.1 출시, 뉴노멀 시대를 앞두고 위생관리 등 거주자의 수요에 대응한 주택 관련 상품 확충에 나섬.

다. 기타

- △세키스이화학공업은 창문을 열지 않고 깨끗한 공기를 흡입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환기·공기조절 시스템을 2020.7월 중 출시한 신제품에 표준 탑재, △시미즈건설은 필요에 따라 다이닝 룸을 빌트인 칸막이로 막아 5평 정도의 개인 공간으로 이용 가능한 공동주택 개발, 부동산 회사 및 사택을 검토중인 기업에 제안해나갈 계획임.